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대기업그룹간 사업구조 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 논쟁

- (논쟁 배경) 5대 기업그룹의 사업구조 조정안(빅딜)이 발표되자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됨
 - 정부의 세제·금융상의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가 논쟁의 주요 대상임
 - 이 외에도 독과점 폐해의 발생 가능성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
- (정부지원 필요론) 출자 전환 방식의 금융지원은 기업과 은행이 모두 이득이며 시장점유율 상승이 반드시 독과점 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
 - 금융지원: 기업들이 요구하는 금융지원은 부채탕감이 아닌 대출금의 출자전환임
→ 이는 해당 기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기업가치를 높이게 되므로 은행들도 출자 전환한 지분의 가치가 높아져 이익을 보게 됨
 - 대출금의 우대금리 적용 요구: 국내 5대 기업그룹은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저리의 외자를 조달하고 있으므로 대출금의 우대금리 적용은 별도의 특혜라고 볼 수 없음
 - 독과점 폐해: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겠지만, 이미 대외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므로 국내시장의 시장점유율만으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음
- (정부지원 불가론) 세금과 금융상의 지원은 기업들의 부실 경영에 의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입장
 - 정부의 금융 지원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손실이 되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충당하게 될 것임
 -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발행하여 은행의 감시 기능을 제고해야 함
 - 합병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상승은 효율성 제고가 아닌 독점력 상승으로 인한 수익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손실을 의미함

□ 실업 대책 우선순위 논쟁

- (논쟁 배경)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자 실업 대책이 사회적·경제적인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고용 창출 정책과 생계 지원 정책간의 우선순위 논쟁이 대두됨
 - 1998년 7월중 실업률은 7.6%, 실업자는 165만 명으로 최악의 실업 사태를 보이고 있음
 - 실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실질적인 실업자는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많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, 경제 상황을 볼 때 실업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실업 대책은 사회적·경제적인 최대 과제로 대두됨
 - 최근에 정부가 '99년도 실업 대책 방향을 발표하자, 이에 대하여 경기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
- (정부의 정책 방향) 당초에는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 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 창출로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나, 내년도에는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발표함
 - 지난 8월에 새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에서는 총 10조 1,719억 원의 실업 대책 예산을 배정하였는데, 그중 고용 창출을 위해 3조 3,000억 원을, 실업자 생활보호를 위해 2조 1,140억 원을 배정함
 - 실업자 생활보호 예산은 지난 3월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 약 50%가 삭감된 것임
 - 최근 9월에 정부는 '99년도 실업급여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실업자의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확대하는 등 실업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는 실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함
 - 현재는 정부 내부에서도 생활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(보건복지부)과,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흡수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(노동부)이 제기되고 있음

- (실업자 구제 정책 우선론)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어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구조조정과 경기 활성화를 통한 위기 극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
 - 현재 실업자의 93%가 실질적으로 실업 급여를 못 받고 있으며 이중의 상당수는 생계적인 곤란을 겪고 있음
 - 이러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없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,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
 -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

- (경기활성화 우선론)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고용 창출을 꾀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고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
 - 사회보장적인 실업 정책을 실시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,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실시한 영국과 미국은 현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
 - 실업자 생활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음
 -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함
 - 경기활성화를 통해 경제가 1% 성장하면 6~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음
 - 경기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은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창업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의 고용 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어야 함

(정 반 석 bsjoun@hri.co.kr ☎724-4045)